

학교 200m내 노래방·유흥주점 퇴출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방·유흥주점 등 불법시설의 자진 이전이나 폐쇄를 유도해 2022년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모든 불법시설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후년부터 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은 해당 공사가 학교 주변 환경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취지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에 따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르면 내후년 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해당 공사가 교육환경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년 서울 종량구에 위치한 A 초등학교 인근에서 고속도로 설치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등 학교 주변 대규모 건설공사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자격요건을 갖춘 자나 기관에 한해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교육환경평가 대행기관 등록요건도 마련하고 2021년부터 '교육환경평가사(가정)' 민간자격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중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는 별도의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환경 보호 업무가 증가하면서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교육환경 보시스템을 통해 학교주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교육환경보호 계획을 모두 공개하고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환경보호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주변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 하도록 하는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신

학교 주변 대규모 건설공사 교육감 승인 의무 교육환경 저해요인 모든 불법시설 없애기로 우선순위 매겨 조치하는 '신호등제도' 도입

호등'도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관련 현황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정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나서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학교주변 불법시설의 자진 이전이나 폐쇄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모든 불법시설의 이전이나 폐쇄를 완료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은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마련해 연차별 교육환경 보호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뉴시스



몰카 예방계단 6일 오전 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종양로역 계단에 '허락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몰카 예방 홍보문구가 지나는 시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경실련 "공수처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제도화돼야 공직 비리 척결·검찰 개혁 추진 가능"

광주경제실천시민연합이 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동명동 경실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

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과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처장·연임·금지와 처장추천위원회·인사청문회'로 공수처를 특정 정당과 대통령의 영향

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돼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국회는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정기국회 종료 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용규 기자

완도해경,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서 관할 등록 낚시어선은 총 213척으로 이용객은 2015년 10만여 명, 2016년 11만 5천여 명, 2017년 11월 기준 10만여 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2

건이 발생했다. 완도해경은 파출소별 낚시어선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출항 전 승객 신원확인 ▲구명동의 촉용 등 안전수칙 준수 계도 등 입체적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경찰, 메이총리 암살모의 테러용의자 체포

영국 보안당국이 다우닝기에 폭탄을 설치해 테리사 메이 총리 암살을 모의한 남성 두 명을 체포했다.

5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는 앤드루 파커 보안정보국(MI5) 국장이 이날 내각에 MI5가 지난 1년 간 9개의 테러 계획을 저지했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파커 국장은 "지난주 가방으로 위장한 즉석 폭발 장치를 이용해 총리 관저를 파괴하고 칼로 메이 총리를 공격할 계획을 꾸민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런던 경찰청은 런던 북부에 사는 20세 남성 나이무르 자카리야 리만과 베링엄에 사는 21세 남성 모하메드 아킬 임란을 테러 모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알려졌다.

경찰청 대변인은 다만 이들의 테러 모의를 메이 총리 살해 계획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두 용의자는 6일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MI5가 지난 5월 80여명의 시상자를 낸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를 담당한 데이비드 앤더슨 왕립지문변호인은 이날 "자살폭탄 테러 범 살만 아베디가 MI5의 감시 대상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앤더슨 변호인은 올해 들어 영국에서 발생한 네 차례의 테러와 관련한 보안당국의 조치를 검토한 결과 "다른 패를 썼다면 특히 맨체스터 테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메이 총리 대변인은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물리났지만 그 위협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선전으로 영국과 외국에서 공격을 장려하는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우디 "부패혐의 376개 계좌 동결"

반부패 혐의로 유력 왕자 및 전현직 정치인, 기업가를 대거 체포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사면을 내건 재산 물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사우디 알 모제브 사우디 경찰총장은 이날 "지금까지 320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아직도 376개 은행 계좌가 동결 상태"라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들은 "이제 159명이 리야드 리조트 호텔에 구금돼 있다"며 "부분부 투쟁에 연루된 자신의 국가 환원에 동의해 점차 석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사우디는 살만 국왕의 칙령으로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반(反)부패위원회를 출범하고 왕자 및 고위 관리 등을 대거 구금했다. 반부패위원회는 조사, 체포, 여행금지, 자산동결 등의 권한을 갖는다. 혐의가 밝혀지면 연관된 돈은 모두 사우디 재무부로 상환된다.

사우디 당국은 구금된 인사들을 향해 석방 조건으로 재산의 국가 환원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들은 최대 1000억달러(약 109조 1100억원) 환수를 내다보고 있다.

미 여성 묘비 밑서 '다른 남자' 유해 발견

미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독립전쟁 당시 '풀리 대위'란 별명으로 유명했던 여성 영웅의 묘비(사진) 지하에 묻힌 것이 그녀가 아니라 무명의 다른 남자 유해라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5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웨스트포인트 묘지에 있는 문제의 미카렐 코빈의 무덤 곁에서 담벼 보강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묘지를 훼손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그 후 거기 묻힌 유해의 뼈를 조사하게 된 결과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의학팀의 인류학자들이 검사로 밝혀낸 결과, 이 유해의 주인공은 19세기 죽은 남자였다.

코빈은 1776년 뉴욕시의 전투에서 남편이 전사한 뒤 앞장 서서 대포를 발사하면 용감히 싸웠던 여성 독립영웅으로 유명하다.

그는 포트 워싱턴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24년이나 더 생존했으며 미국에서 군 복무 연금을 수령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다.

코빈의 진짜 유해가 어디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이다. 이 무덤 부근 지역에 지하 레이더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다른 유해의 흔적도 찾았지 못했다.

뉴시스